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2
----------	------

발의연월일 : 2020. 7. 1.

발 의 자 : 박완주 · 문진석 · 신정훈
박영순 · 홍성국 · 문정복
윤재갑 · 김영배 · 양정숙
김승원 · 강준현 · 이성만
의원(12인)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원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 전국적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회의장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제164조의2에 따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함(안 제3조).
- 다. 분권회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분권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분권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분권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의2에 따른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자치분권회의의 기능)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사무의 지방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지방자치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 ① 국가자치분권회의(이하 “분권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기획재정부장관
4. 교육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6. 국무조정실장
7. 법제처장
8.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9.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 ② 대통령은 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된다.
 - ③ 의장은 분권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제4조(분권회의의 운영) ① 분권회의는 분기별로 각 1회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분권회의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② 분권회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을 분권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권회의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분권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서 개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권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분권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분권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각각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2.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및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심의 결과의 이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권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분권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